

기상청 “남해서부 먼바다” 주민들이 ‘앞바다’로 바꿨다

여수 손죽도 등 낮은 파도에도 배 끄겨 1,400명 집단민원 지정변경 이끌어내

‘외딴 섬’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섬을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 인정해달라는 오랜 숙원을 풀었다. 여수에서 배를 타고 1~2시간 들어가야 하는 연도(彦島)·손죽도(巽竹島)·초도(草島), 550여 세대 1천400여 명이 사는 이 세 섬은 육지에서 직선거리로 20~26km 떨어져 있는데, 기상 예보구역 상 ‘먼바다’에 속하는 곳이었다. <지도> ‘먼 바다’는 ‘앞바다’에 비해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1.5배 이상 많이 발표된다. 이 때문에 하루에 두 차례 육지로 가는 배는 허구한 날 끊겼고, 섬 주민들은 급한 환자가 발생해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육지에 나갔다가 배가 뜨지 않아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다반사였다.

섬 주민들은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조업을 나가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특히 연도보다 불과 1km 육지에 가까운 섬인 안도는 ‘앞바다’에 포함돼 있어 세 곳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기상청 ‘예보업무규정’상 연도 등은 ‘앞바다’로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규정에 “해안선(서해·남해)에서부터 직선으로 약 37km 떨어진 곳은 ‘앞바다’로, 이후는 ‘먼바다’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지난 1984년 구역 설정 당시 예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세 섬을 ‘먼바다’로 지정했던 것이다. 주민들의 불만 폭발은 결국 기상청을 상대로 한 집단민원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9월 ‘남해서부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구역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기상청에 제출했다. 기상청은 두 차례의 현지 답사와 해양기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지난 7월 이 섬들의 예보구역을 ‘앞바다’로 조정했다. 기상청



■연도·손죽도·초도 위치
*앞바다: 육지로부터 직선으로 37km 이내

보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정확해졌으며, 원래 규정을 지키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버거운 섬 생활의 발목을 잡던 민원이 해결된 후 섬 주민들은 ‘연륙교(連陸橋)가 놓인 것 같다’며 반가워하고 있다. 여수로 가는 배가 거의 끊기지 않아 육지로 나가는 주민들이 20% 가까이 늘었다. 어린이들의 조업 일수도 늘어, 연도의 경우 장어잡이 등 35척의 어선이 거의 매일 출항했다. 연도 주민 손덕연(76)씨는 “해상이 풍랑이 불지않아도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움직일 수 없어 정말 답답했었다”면서 “이제 웬만해서는 배가 끊기지 않고, 조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어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전했다. /이승배·강성훈기자 lsb54@

따로 노는 서남해안 프로젝트

J·S·남해안 등 특별법만 3개... 혼선 우려 사업 중복·집중력 저하... “상호협력 절실”

낙후된 국토 서남부의 획기적 발전이라는 공동목표에서 출발한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와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계획), ‘남해안특별법’ 등 대규모 개발프로

젝트가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사업들은 특별법 제정 및 정부차원의 행·재정 지원과, 외자유치를 포함한 대규모 사업비 확보

등 특수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지만 개별 추진에 따른 초점 분산으로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정부 차원의 기구신설과 특별법 제정 추진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는 사업 계획 중복에 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즉 이미 사업지구별로 개발계획이 진행중인 J프로젝트 예정지인

해남·영암을 포함해 무안·목포를 아우르는 S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사업방향의 상충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관계자들은 물류와 레저, 바이오산업 등을 주축으로 하는 S프로젝트와 관광·레저 중심으로 추진중인 J프로젝트가 부분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본 요건인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남도가 J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이미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마당에 S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시 기존의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생길까 혼선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경남·부산시가 공동 추진중인 남해안발전특별법만 역시 대규모 개발을 뒷받침할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투자유치 여건 조성 등이 골자로 양대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크지만 사전 조율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인접된 사업지구 관련성이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사전 협의나 정보교환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인 이상 호 유익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채널 마련도 시급하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모유 먹는 우리아이 방글”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에서 열린 ‘제1회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생후 4~6개월 된 아이와 부모 60여 쌍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韓, 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 1위

학령인구 감소율도 최고... 대학학비 네번째로 많아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대학 학비도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EAG)’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학교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가장 높은 2.

9%로 평균(0.7%) 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공립대학 학비는 호주(5천289달러), 미국(4천587달러), 일본(3천747달러)에 이어 4위였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뒤인 2015년에 현재의 7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美 “더이상 北 설득 안해”

대북제재 착수 방침... 韓 “외교적 노력 필요”

미국은 ‘미사일 국면’ 이후 북한의 동태를 분석한 결과 ‘협상의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현재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더이상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유엔 결의안에 따른 제재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한국

과 중국 등 관련국들에 전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12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이상 설득노력은 없다’는 최종판단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미국이 주도

하는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1일 유명한 외교부 차관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또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만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

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밝혔다. 한편, 미국은 조만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4%
진주름과 칙칙함을 동시에
매직이펙터

IOPE